

이상호 “우병우 사퇴 안하면 국회가 나설 것”

〈더민주 원내대표〉

野 “사퇴 선행돼야 진정성…특별감찰은 면죄부” 총공세

아권은 26일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시간벌기용’, ‘뒷북감찰’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현행 특별감찰법 상 감찰의 대상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들어 (우 수석)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수석이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이젠 국회가 나설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백해련 의원은 특별감찰관 조사 착수에 대해 “특별감찰은 우 수석의 사퇴가 선행

되지 않고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사퇴를 하지 않고 대통령 보좌막 아래에 있는 지금,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 감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을 기다려보자며 우 수석의 사퇴를 미룬다면 ‘셀프감찰’, ‘짜고치는 감찰’이 될 수 있다”며 “우 수석은 즉시 사퇴하고 감찰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 수석을 현직에 두고 감찰이란 방식을 선택한 것은 특별감찰이라기보다 특별대우라는 인상을 준다”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감찰이 국민의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성의 없는 감찰을 대통령 휴가 복귀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실시는 당연한 일이나, 늦었다”며 “이번 감찰 개시는 직을 연명하게 하고 감찰의 미온적 태도에 변명거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감찰수사도 비리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20대 국회의 절대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연일 터지는 의혹과 우 수석의 버티기로 국민 가슴에 ‘우병우 핫방’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의도, 사퇴할 용의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고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뒷북감찰’이자 감찰 수사 시간벌기용으로, 특히 현행 특별감찰관법 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조사가 빠진 감찰은 ‘양꼬 없는 진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감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특별감찰에 대해 “뒷북감찰이고, 감찰 수사의 시간벌기용이며, 면죄부감찰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며 “우 수석이 지금은 분명히 가야 할 때다. 일반인 신분으로 감찰 수사에 응해 마지막 가는 뒷모습을 아를담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정작 문제가 된 넥슨과 우 수석 처가와의 부동산 거래에 우 수석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 진경준 감사장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애초부터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세탁용 감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공수처’ 의견분분

긴급 공개간담회 개최

“감찰의 권한남용을 막으려면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기소권을 분리한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

여름 정국의 최대 입법쟁점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찬반양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26일 개최한 ‘감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에서다.

찬성 측은 공수처가 감찰의 권한남용을 막을 적절한 기구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반대 측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오히려 고위공직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동 추진 중이지만, 최고위원을 지낸 이상돈 의원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희 경향대 교수는 “그간 감찰의 권한남용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감찰에만 독점시킨 한국적 특수성에서 비롯됐다”며 “권한남용을 막고 공평·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는 해법은 특별수사처를 신설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사는 기소로 통제하고 기소는 재판으로 통제하는 것이 세계보편의 사법구조”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은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지미 변호사도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는 물론 비대한 감찰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구본진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수사는 보통 일반 사건에서 불거지는 데, 엄청난 노력이 투입돼야 성공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처벌의 주체가 아닌 검사들이 굳이 그런 노력을 투자하고 범죄를 밝혀서 공수처에 넘길 것인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또 “감찰, 특검, 공수처 모두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며 “만일 고위공직자, 특히 검사에 대한 감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 현재의 특검임사 제도에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보완해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경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 나온 공수처 안을 보면 입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공수처의 활동이 비정상적일 경우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며 “수사권의 분산은 있으나 기소권을 분리한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경기자 hapif@kwangju.co.kr

禹 감찰 착수

특별감찰관제 도입후 첫 조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감찰 조사에 착수한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지난 주말”이라고 답하며 “벌써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진경준 감사장 승인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견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감찰 대상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이번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함에 따라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표정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우 수석을 둘러싼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에는 아직 별다른 변화 조짐이 없어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링 위에 오른 ‘추경안’

여 “신속 처리” vs 야 “문지마 협조 안돼” 본격 기싸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26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민생을 화두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한 데 비해 야당은 항목별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 다음달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

평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속한 국회 처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원우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실증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부·야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야당이 발목 잡지 말고 서

둘러 처리해달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8월 12일에 (추경안)을 처리하든, 8월 말에 처리하든 실제 (예산) 집행은 9월이다. 빨리보다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문지마 협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성열 비대위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긴급 수혈이 불가피하지만, 왜 부실해졌는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귀한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당권주자 단일화 논의 활발

비박 정병국·김용태에 주호영 참여 가능성…친박 홍문종 변수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이 다가오면서 당권주자들 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분위기가

단일화가 상대적으로 가시화한 쪽은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들이다. 특히 정병국·김용태 의원은 출마 전부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후보등록을 전후해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뒤늦게 출마한 친이계 출신 주호영 의원도 정·김 의원과의 단일화에 동참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이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등 정국 현안에 비슷한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 불거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전대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 전 지사의 출마 배경에 모종의 ‘의도’가 숨겨졌을 수 있다고 보고 그가 출마해도 단일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지사 출마에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세 사람이 하나로 뭉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김 전 지사는) 단일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친박계 진영에선 중도로 분류되는 이주영 의원까지 포함한 후보 단일화를 모색 중이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출마할 경우 그를 ‘친박 후보’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친박계 후보 단일화에 변수는 홍문종 의원이다. 홍 의원이 출마할 경우 이 의원에 대한 친박계의 지지가 일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청원 의원 주재지하러는 움직임”이라며 “혁신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 공동으로 뜻을 모으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